러시아 연방민법에 대한 비교법의 의상

I. 들어가면서
II. 러시아 연방민법 소개
   1. 러시아 연방민법 개요
   2. 러시아 연방민법의 특성
III. 러시아 연방민법의 기본적 특성
    1. 기본적 전개
    2. 기본적 특성
IV. 러시아 연방민법의 특성
    1. 제조작업의 특성
    2. 내용과의 특성
       1) 민권의 건설
       2) 교류의 자유의 제도와 국가의介入
V. 결론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Max Weber는 『통상사회학論集』의 序文에서, 研究者들이 比較文
화학을 고찰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한다고 한다.
즉, 찰국인들은 그들이 노태제 어떤 사회적 상황에 처하여 있었기에, 
예로 그들은 기반 위에서 고려하는 형식적 과약화와 피복적을 지니는 문화현상을 
장출하였음을가. 바꾸어 말하면, 비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그와 같은 유연적 
적 또는 서양적 문화현상을 장출하지 못하였음이 라고 제기하는 의문이 
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H. Berman은, '법의 변혁' 에서 '법은 민족 
적과 민족적인 아니라, 민족적, 민족적 및 민족적 지도 포섭하는 (중합적)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사회적 약속 
(social commitment)을 향으로 하는 것' 이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지적 
은 '포스트모더니즘'적 문제의 제기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Max 
Weber의 지적이 '東西文化에 대한 비교적'의 교향리라 한다면, H. 
Berman의 지적은 '新日-民国의 礼序로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礼序에 
로의 흐름'이라는 역사의 교향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능 
문화의 幼面에 비추어 본다면, Max Weber의 지적이 비교적(法)文化方論 
의 피보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H. Berman의 지적은 비교적(法)文化方論 
의 與保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비교의 考察도, 위와 같은 横軸과 縦軸을 함에 설 
정하여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러시아民族은 교향리에 있어서도, 西洋民族과 東洋民族이라는 横軸을 고 
려할 때, 근대화와 근기근대화(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縦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民族의 法文化를 고찰하면서 
특히 관심을 둘러掴는 것은, 러시아民族의 地리적으로 西洋과 東 
洋이라는 横의 面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社會主 
義의 이데올로기에서 與社會主義의 이데올로기(市場經濟體制의 與保) 
에의 변모를 겪고 있는 국가로서 이데올로기 縦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比較(法)文化論의 幼面에서 당연히 與保로운 基礎적의 地面인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民族이 이와 같은 특정을 지닌 국가이기 때문에, 法文
리시아 연방민법에 대한 비교적의 실토 3

화의 측면에서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해 먼저도, 필자의 글쓰 · 역사 · 철학 · 사회학의 연구내용에 있어야하기 때문에, 러시아 사회학이라는 토대를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 허위는 필자의 본인의 연구 역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러시아 학문의 관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 이 논문에서는 서론의, 개론의, 종합의, 정리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러시아 연방민법에 대한 학문의 기본치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민법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분야인 민법제제에서 사회경제의 형성과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은 법률적 구체에 중대한 행정법이나 민법에서 민법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러시아 민법의 확장(러시아 민법 시리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러시아 연방민법(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의 특성과 특성을 개발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근 대법학계에 미수히 러시아 연방민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러시아 연방민법 11시

1. 러시아 연방민법 11시

사회주의 시대인 소비에트 연방의 민법에 관한 기본의 자원으로서는 1962년부터 시행된 소비에트 연방민사基本법과 1964년부터 시행된 러시 아 공화국 민사법을 들 수 있다. 페스트로이카(Perestroika)의 보급과 1981년 소비에트 연방민사基本법의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을 목표에 앞두고 소비에트 연방이 불리하였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시행되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다행히도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민사基本법이 개정되었으나
1년이 경과한 1992년 7월 14일 러시아연방민법으로 다시 편어지게 되었다. 즉 1992년 7월 14일 러시아연방법령에서 '경제개혁수행기간 중
의 민사법령계의 규제에 관한 결정'에서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민법이
제정되기까지, 러시아연방법령 및 1990년 6월 12일 이후의 러시아연방
법령에만 해당하는 문, 본질(소비에트연방민사법)을 러시아연방
법으로 적용한다'는 결정에 따라, 새로운 설명력이 없는 행위를 임기
되었다.

2. 러시아연방민법의 제정

위와 같은 결정에 따르 러시아연방법령 1부가 1994년
7월 8일 공포되고 1994년 10월 21일 러시아연방법령 2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법령 3부는
1995년 12월 21일 러시아연방법령 4부는 1996년 1월 26일 공포되고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러시아연방법령이adores 단계적으로
제정, 공포, 시행되는 것은 그나하면 기존에 여러번 하였지만, 러시아
연방의 경우는 제1부와 제2부가 제정되므로써 정책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러시아연방민법의 성질과 성격

1. 기본의 성질

러시아연방민법의 기본적인 성질은 사회주의의 사회적 정치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위한 도구로서, 러시아연방의 경우 사회주의로부터 자
본주의에로의 역사적 전통이를 관리하면서 경제활동가구가 크게 변화하
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합하하는 기본법인 민법은 격명적으로 변화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시대의 소비에
트 사회주의 정치인 유럽 대표들과 대단히 유사한 민법체제를 취하고 있
은 구도에 혁명적인 민법체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즉 사
회의 시대에 수도인 역사학자와 사회주의 모델은 이러한 관계는 현대법
체제 민법체계를 취하였기 때문에, 로레스트로리아카를과 같은 둘로도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시대에는 자본주의 경
제제계와는 크게 다른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유의 계약적이고 행정적인
구체관계를 대개로 삼는 법체제를 취하였기 때문에, 상품경제 및 화폐경
제제계는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잡지 못하였지만 민법의 연계는 어디까
지나 대폭발적 편제를 취하였다.

따라서 민법전의 제산법 부분의 구성도 폐지, 돌권(소유권), 재권, 상
속의 순으로 규정하여, 이론과 실제 및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론가 대
민법의 구체적 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유래는 사회주의를부터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재배한 새로운 리시아의 민법체계에도 그
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시대의 민법전과 새로
운 리시아의 민법체계 사이에는 민법구성상에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받을 수 있다.

2. 기본의屬性

사회주의체계에서는 원래 법의 국가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
인 체제이다. 법의 폐지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계도는, 당초 제도 어디에도 그 성질을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
체계인 법체제를 추구하였다. 1917년부터 1936년까지 소비에트 리시아
는 국방법, 사회권, 민법, 그리고 마르크스-마케와 여러 가지 유형의 법
을 정비하였고 알게 되었지만, 1930년대 후반 스탈린시대에 들어와
결국 민법체계가 지니고 있는 기본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
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방법을 재용하게 된 이유는 민법체계가 지니는 요
소중 '安定'과 '統一的 管理'라는 요소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스타일은, 당시 소비에트 룼판국가가 처해있던 현실을 고려하여 왜가 어느 때보다도 안정과 중앙집권의 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 소비에트 룼판국가는 현실적인 범계를 창출하기는커녕, 사회주의는 결국 전통적·역사적으로 왜가에 걸맞게 끝나 버린 결
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독자적인 소비에트 학의 창출을 지향하였던 브로메에서 재정을 이어져, 글호야 의식적, 부의식적으로 다른 제도체계로부터 빼앗아 온 독(독)이 하기로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
다.

그러나, 민법의 기능면에서는 대목별로 전통을 가진 국가의 경우와는 전략 달랐다. 소비에트 룼판국가 민법은, 독일의 민법이면서 그 내부구성은 달로의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즉, 전통적인 민법의 근본대상인 "소
民 相互間 그리고 市民과 國家組織(機関)間의 關係を 규율하는 部門"과 "國家 企 業의 相互間關係를 规制하는 部門"이라는, 이론과 구체적인 두
부문이 중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제 하나의 법론 중에 병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사항은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그다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사회주의 경제는 민법관계하기 보다는 근
본적으로 형평관계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기 때문에, 민법은 중요한 역할
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민법은 상품교환을 메개하는 규범형식이기 때문에
사회관계체계가 부정된 시기에는 그 존재근거를 상실히 마진이
다. 또한 소비에트 룼판의 경우는 공산주의적 원칙과의 경계를 보다 비
법의 역할에 있어서도 전혀 달랐다. 즉 前者는 全體의 法社會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었음에 비하여, 後者는 部分의 法社會를 规制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 룼판국가 민법은 그 가자의 구체의 법체제를 동시에
저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민사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삼는 고유의 민법학이 그 기능을 계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현재는 사회관계체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듬부터 끝까지 사회주의시대의 같은 내용의 민법제로사는 사회를 규율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적 필요성에 직면하여 러시아연방민법대의 새롭을 찾을 수는 있다. 예컨대, 소비에트연방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위약규則`가정이 러시아연방민법대에 새로운 규정되게 되었다. 또한 내용의에서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반영하였던 조문이 삭제되거나 감축된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자본에社会组织체에 발달한 동안의 거대규모용을 포함한 복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사회주의의 발전단계에 관한 규정이나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 포트포즈에 관한 규정 등은 전자의 에라 할 것이고, 그 반대로 새로운 경제체계로서 러스계약, 템퍼린즈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의 현대적인 계약규정에 관한 조항들은 풍부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연방국가에서 러시아연방국가로 국가는 민법은 반드시 하여야도 민법대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변하는 없었지만, 그 구성 및 존속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커다란 변화를 임할 수 있다.

### IV. 러시아연방민법의 특징

1. **민법의 특징**

   1) **민법의 기본원칙**

      * **민법의 기본원칙**: 권리와 의무(범위관계), 권리와 의무의 발생근거(범위요건), 인(자연인과 법인)·조합과 회사, 비영리조직, 권리의 경계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계약과 거래, 기간과 소멸시효 등.

제2편 소유권과 기타 물권

Ⅰ 소유권의 내용(정유, 사용, 수익할 평등),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소멸, 공동소유, 토지소유권, 주거가용 소유권, 영업지배권, 물권적 임무 권 등.

제3편 체권 및 충익

Ⅰ 체권의 개념, 체권채무의 당사자, 체무의 이행, 체무이행을 위한 담 보방법, 체권의 양도와 체무의 이전, 체무불이행책임, 계약이행(계약의 개념, 기한과 조건, 계약의 종료, 계약의 변경과 취소) 등.

제4편 채무의 유형

Ⅰ 이자(일반예매, 소매, 몬순공급, 국가수요에 대한 몬순공급, 도급, 이 너지공급, 부동산매매, 기업매매 등).

Ⅱ 기타(교환, 증여, 연금과 생활보호, 리스, 주택임대, 부상사용-사용의 차, 계약-계약충격, 소비자계약, 건축계약, 설계 및 연구용역수행 계약, 국가수요에 대한 수주계약 등).

2) 형제의 신정

① 민법상-일정의 단위를 지향하고 있다.

② 희생사의 방에서 합의 및 희생사법의 제한연구와 단위간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있다.

③ 소유권의 전입에 따라 주택한 나머지 인용지물과 허위물권에 의한 구분은 다단계로 미루었다. 인용지물의 관리와 설립하는 권리와 시술자의 허위를 해당하는 권리와 행의 허위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타인의 허위를 증시한 결과, 허위의 선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⑤ 민법과 민법 보상의 조합의 민법에 합의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의 합병과 혼재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최근 자본주체성의 지향하고 사회보장형 민법으로서의 새로운 청구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가는 민법에 대한 물품용역의 제한 및 연구용역의 제한 그리고 국세의 위임에 대한 제한의 지향 등은 민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의 용역의 제한과 민법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문적이고 사회적의 용역으로서의 제한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민법의 개념 및 민법 원칙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 다.

(8) 민간서약 및 최근의 계약법은 본법과의 불가피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1) 전통적 민법의 정립

(1) 쟁점

1991년 12월 소비에트리공법이 해체됨으로써 소비에트 사회주의는 봉건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은 사회주의의

에 함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부정되어 온 '私有' 개념이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私有' 개념의 개성은 이에 부적합이 되었다. 그는 '私有' 개념의 개성은 일시에 부적합하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 다. 1985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개혁은, 당초에는 사회

주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社会主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계에서 사회주의에의도를

음인하는 독한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사회주의의 원리

와 대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파도가치 개념과 원리가 세

기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무리와 혼란을 초래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상한 과정을 거쳐 '私有' 개념은 제정되어 왔던

것이다.

페트스트로이카의 시작과 함께 소비에트리공법의 장식물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시스템의 기초는
한국식 '사회주의의 소유'이며, 이에는 '국가의 소유'와 '동동조합의 소유'
(포트호즈 등의 소유) 그리고 '사회공동소유' (농동조합, 공산
당 등의 소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소유'라는 것은 '전
人民의 소유'를 의미하고, 가장 고차적인 소유형태는 자라진다. 그
외에 개인적 소유도 인정되었지만,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수입으로 취
득한 소유재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적 소유의 기초인 토지
와 건물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가정부업경영
을 위한 생산재의 소유는 인정되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가족)경영은 인정되었다.

페트스토로이카결국한국식으로 할 수 있는 1985년 사이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개선을 도모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
주의적 소유제도 유지하면서 그 정책적· 현실적인라는 국방의 소유제도
를 분명화함과 동시에 소유형태를 다양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런
대, 1986년에는 각 국가의 소유를 폐지하였고(개인의 소유는 생산· 서비
스의 소유를 사용한 영업을 인정하였지만, 노동자의 고용은 급격히 그
주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1987년에는 국산기업을 폐지하였으
며(국유기업은 전의 독립적으로 경영하였다). 1988년에는 협동조합
화를 폐지하였고(동일조합이라는 이름을 빼앗은 기업의 설립을 인정함
으로써 농노동자 등의 서비스부문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1989년에는 아르바이트(업무)범위에 정립되어 이르렀다(기업의 노동집단에
계 국유기업을 인입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한국식으로 할 수 있는 1980년대 전반기에는 일반화를 뒤이하게 되
었다. 1988년 국가의 세트 투팀 장악이 무너지고 공산당체제가 풍
미하는 국민을 타이한하는 소비에트연방에서도 1990년 3월 혁명개정을
통하여 원래의 '사회주의의 소유'가 '전의 소유'로 개정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봉건체를 의미하는 전적분권체를 타락함으로써 대류평설체를 향후
과 동시에 '사회주의의 소유'라는 용어로 계속되어 '전의 소유'는 표
리시아공화국에 대한 비교적의 연구 11

현으로 사실상 '私的 所有'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0년 3월 협력개발을 통하여 '권력관계'와 '소유관계'양방향에서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함과 동시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1990년 3월 소비에트연방의 『私의 所有』이 제정되어 『私의 所有』를 인정하였지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데 그쳤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私의 所有』를 승인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사실상 인정하였지만, 착취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12월에는 제정된 러시아공화국 『私의 所有』 방향은 『私的 所有』라는 용어를 계반에서 인정하는 작업을 빼내는 경우, 이 공민의 『私의 所有』라고 하여 자기에게 속한 재산을 절유, 이용 및 처분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私의 所有』의 법조가 『私의 所有』를 얻어 『私의 所有』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 러시아의 『私의 所有』는 러시아의 근대적 표현을 복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도 불구하고, 『私의 所有』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소유형태 중의 하나로서 유효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생산수단의 대부분은 아직『國有 所有』에 귀속된 재가 지속되었다. 그 후 1991년 7월에는 소비에트연방과 러시아공화국의 『私の 所有』가 처음으로 제정되어 극우기업의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1991년 8월 쿠데타 마추스바니가 거쳐 같은 해 12월에는 도미어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됨으로써 15개 독립국가로 분해되었고, 현재 러시아공화국은 12개 독립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복제적인 면에서 『私의 所有』 개념이 재생각하게 될 것은 1990년 12월에 러시아공화국 소유법이 제정된 데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소비에트연방의 『私의 所有』와 러시아의 『私의 所有』의 15개 국가의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사유제도의 상황에 반대일장을 지녔던 자들은, 위와 같은 러시아 소유법의 제정을 들어서, 사회주의의 자본 주식으로 대체하려는 『私의 所有』 또는 러시아 소유법이 『私의 所有』를 폐쇄하였다. 12월 12일에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私有" 개념의 재생은 직접적인 "私有" 개념의 부활이 아니라 길러진 길을 찾아온 "私有" 개념의 재생과정이었다. 즉 샤도스트르모가 말하는 "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기 위한資本主義體制에 의한 전환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社會主義의 所有"라는 뜻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확대 한다는 이론과 "馬克思의 個個人的 所有" 개념의 부활 및 실현이고, 국가가 기업이 함께 기업을 소유한다는 "分業所有(二重所有)"理論이며, 소유형태가 "多様化 중의 私的 所有"임과 동시에 일주의 國家所有制度는 "非國家化"함에 다향하여 다행했던 민주화 내지는 일대화를 의미 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이념적 출발점이 제한의 "私有化"로 배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私的 所有"라는 개념을 창출·대체하면서 '市民所有'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集団所有' 개념을 창출하였다. '集団所有'의 데모적인 형태로서 집단기업, 아메리카기업, 협동조합기업 등 을 들 수 있지만, 株式會社制度의 경우, 公企業으로서의 企業主體性을 인정하는 논리를 전개한 것은 아니고, 集団의 所有形態로서의 기업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결국 '社會主義의 所有'의 한 형태로서 그 地位를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로자리에 대한 사유화는 강한 저항에 부딪히어 이를 '相談할 수 있는 結合占有權'이라는 適應期의 人 權利概念으로 창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聯邦 및 러시아聯邦에 있어서의 "私有" 개념의 재생은 점차적 또는 돌연적으로 표출된 현상이 아니고, 외도기적 개념적체를 갖추면서 "私的 所有"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1991년말 소비에트聯邦이 해체되었던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난 후에는 "私有"와 "社會主義"의 矛盾이라는 근본에서 빛이 빛나기 때문에, 法理의 矛盾 속에서 갈등할 필요 는 없게 되었다.

(2) 러시아聯邦民法上的 所有權

러시아聯邦民法 제8조에서는 "러시아연방에서는 경제권의 통일, 상품
서비스 및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의 보호,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사유, 국유, 자치체소유와 그 밖의 소유형태를 평등하게 승인하고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제1조에서는 '러시아연방에서 서 로지와 천연자원은 완전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생활과 활동 의 기반으로서 이용하고 보호한다. 로지와 천연자원은 사유, 국유, 자치 체소유와 그 밖의 소유형태의 계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법 제212조 제1항에서도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 국가, 자치체 기타 주체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산은 개인, 법인, 연방 그리고 연방의 기관과 자 치체에게 귀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산권 주체의 다양화를 기반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화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정향은 개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자치체 및 연방 그리고 연방의 기관에게도 소유 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고, 개인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헤겔스토로이카의 정체의 정향에 비추어 볼 때 '다양화 중의 혼란의 모든'라는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공화화를 합법하 는 한의 몇몇의 암묵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로지에 대하여도 러시아연방법 제260조 제1항에서는 '로지에 대하여 물지단위 빌딩법(land parcel)로 소유하는 사람은, 당해 로지가 법률상 거래 또는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한, 매매, 중여, 임대(lease)할 수 있고 기타의 발생(lease)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로지에 대한 사적 권리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1조 제1항에서는 '로지의 빌지에 따른 경제는, 로지에 대한 권리와 로지보유권에 대하여 국가기한이 소유권자에게 발생하는 로지증서(land legislation)에 따라, 로지법에 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한다.'고 규정하여 공의 허용범위에 의한 공사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3) 所有權變動

리시아 민법 제223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계약에 따라 동산의 취득자는 이동(引渡)받은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유권의 (전달)변용이 국가부채에 의할 경우,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은 동기한 때로부터 취득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론과 형식주의(相談 原則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4조에서는, '동산의 이동의 경우에는 소비자(消費者)에게, 그리고 이동의 무시 하여 송부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자나 운송기관에게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은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引渡主義, 送付法則), 또한 '동산은 취득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실제로 정당한 때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转让引渡 또는 占有改定),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의 정당·상태에 도달하면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정당성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당사자가 서명한 讓渡書(transfer certificate) 또는 기타의占有 전달증명서(transfer 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제556조)(不動產物權變動을 침략하는 讓渡의 交付-物權變動을 표시하기 위한 讓渡의 交付).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기 체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同時履行의 抗辯權), 매도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履行強制), 損害賠償를 청구할 수도 있다(제396조, 제463조 제2항).

결국, 이와 같은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경우 不動産買賣契約, 所有權轉移登記, 占有移轉, 讓渡書의 交付 등 4단계의 所有權移轉過程를 규정하고 있고, 동산의 경우에는 引渡는 権利變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不動産買賣의 경우에는 전도를 통한 아나타 占有預備 및 讓渡書의 交付 그리고 動産買賣의 경우에는 引渡는 公示 方式을 요구하고 있고, 送付債務의 경우까지 규정하여 物權變動의 時期
(4) 物權

所有權者에게는 不法占有者에 대한 回復請求權(claim for recovery of property from another’s unlawful possession : 제301조), 遺失物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被奪去의 재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claim for recovery of property from acquirer in good faith : 제302조), 不法占有者에 대한 回復請求於物의 激算(settlements at recovery of property from unlawful possession : 제304조) 그리고 占有의 剝奪을 違約의 剝奪에 대한 預防 및 難除請求權(protective rights against violation not involving deprivation of possession : 제304조)을 규정하여, 이론과 物權의 请求權 및 物權削奪에 대한 回復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2) 契約自由의 原則과 契約自由의 原則

소비에트 聯邦民事基本法과 비교할 때, 러시아聯邦民法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契約”과 “契約의 劃定”의 명제성을 둔다는 점이다. 과거 国영기업간의 剝奪合約는 국가 계획당국의 정책에 따라 허용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간에 실현되는 계약(契約契約)은 계약에 합치지 않으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민법상 효력을 잃거나 둔하였다. 물론 등기상의 剝奪契約가 모든 계약에 따라 규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계약체결에 이의의 剝奪契約에 대한 剝奪가 그 행위에 특별히는 허용하였기 때문에 계약체결 약이 가지는 정례적, 법적 의무는 대단히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聯邦民法典에서는 과거의 계약과 法制체제라기보다 행정 행위로 인한 당사자에게 부과되었던 外의 意思에는 구속받지 않고, 당사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法制체제가 보장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자본주의 계약체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론과 "契約自由의 原

第938940
(2) 가격지정의 자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가격지정을 들 수 있다. 리시아 혁명 후 창설된 제424조 제1항에서 '항의 이행은 당사 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격지정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는 있다. 즉 민법 제424조 후문에서 '공통요금, 상장가격, 기초환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가격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규제한다.'고 규정하여, 공정가격 또는 조정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대상인 상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에만 의존하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기관의 공정가격을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당하거나 대수용은 그와 같은 뒷면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줄 것을 경제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제425/426조 참조.

이와 같은 가격지정법은 195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격지정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리시아 혁명 후 창설된 국가기관의 의무에 의한 가격지정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공통요금, 상장가격, 기초환율 등의 공정적 성격이 정당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정가격이나 조정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장가격의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여 보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종합협정(國家의 介入)

국가가 계약의 체결에 개입하는 예는 비단 가게질경의 경우뿐만 아니라도, 예컨대, 재산의 양도(conveyance of property), 서비스의 제공(rendering of services) 등에 대한 예약(preliminary agreement)(제428조), 공매에 대한 공예계약(agreeement at public sale)(제447조), 국가가 계약당시자인 경우의 국가 냉입계약(state contract)(제427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므로 인하여 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 여기에서 공공계약(public agreement)이라 함은 소재상업, 공공수송기관에 의한 운송, 통신서비스, 에너지공급, 의료서비스, 호텔업 등 영리단체가 계약의 일방이 되는 경우와 상품, 도품, 서비스의 소비자(이용자)가 반란 계약당시자인 계약의 경우를 말한다(제426조). 이와 같은 공공계약의 경우, 영리단체가 당해 상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제426조 제3항). 그리고, 법률이 정한 경우, 러시아연방정부는 공공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를 지속한다(제426조 제4항).

이러한 규정은 공공계약의 구속력을 인정받지만 아니라 연방정부에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모범계약 model terms and conditions of agreement, 제427조). 이것은 공공계약이 소비자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권리와 약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요성에 따라 유연한 계약조건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제도와 그 목적으로 잡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으나, 그 법적지 지나치게 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계약에서 복지접을 위해서는 안리(民법 제426조 제1항 주문), 별매가 강하는 특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계약의 조항은 모두 소비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民법 제426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은 조항에 의한 공공계약의 기
한이나 조건은 부효라고 규정하여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고(민법 제426조 제5항), 이와 같은 규정들은 수해로부터의 원칙을 철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多數의 任意認定 條項

국가가 흉공개악에 개입하는 경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인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러시아민법에서 높게 떠는 것은 임의규정이 지나치게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으로 본다면, 한국 민법의 경우 제약규정의 200여개 조문만에 비하여 러시아 러시아 민법의 경우는 650여개 조문에 달한다. 이와 같이 많은 임의규정을 과연 민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의 규정은 실제거래관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하겠 민법규정의 無意味化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임의규정의 多數現象은 민법제도에 대한 임법 정책적 고려가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네덜란드 민법의 경우는 契約各例에서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소수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임의규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민법의 경우, 임법의 경우, 제약규정을 제약당사자들에게 일명자 가 임의규정이라는 형태로 조언할 필요는 없다는 사고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와 비교하여 본다면, 러시아 러시아 민법에서는 임의규정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제약당사자들에게 많은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장생애생활에 바탕을 두고 형성적 규제라는 수단을 취하면서 제약자유의 원리를 실현하려는 한편 상생한 법적(행정적) 규제를 취함으로써 비로소 제약자유 및 원리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 통일적인 러시아생활 사장생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임의규정이라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거래법분야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
도 있다. 결국, 임의규정을 통한 비행정규계약명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을 더욱더 공고히 확립할 수 있다는 사고와 러시아시장의 통일적인 법적규범의 강화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은 대단히 유호한 수단이라는 사고가 그 절연에 발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模範契約

민법 제427조 제1항에서는 「여러 가지 계약기반과 조건은 계약의 유형이나 소급된 계약문서에 규정된 모범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론과 模範契約(model terms and conditions of agreement)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범계약 또는 모범계약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나, 개인의 자유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적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각종의 업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모범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러시아연방의 경우에서도 1980년대마지막 각종의 모범계약, 기본건설도급계약, 화물운송계약 등에서 많은 모범계약 또는 모범계약이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계약에 대한 개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연방민법에서는 제427조 제2항에서 「계약에서 모범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모범계약은 제5조 및 제42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상거래규범(usage and customs of business commerce)으로서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범계약을 국가개입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점검하지 않고 계약에 대한 보호의 基礎 للأ도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實務契約의 特殊類型

특별법제의 민법에서는 계약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물 또는 영행동을 구체적으로 통일적인 계약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입법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혼합계약 또는 무형계
아이하는 이론으로 해결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 연방법에서도 이론과 혼합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인정하고 있다(제421조 제2/3항).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민법상에서 논의되는 것은 일반 매매계약 이외에도 몇 가지의 특수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장 소매계약(retail purchase and sale)의 경우(제492조 이하), 소매계약이라 할은 개인, 가족, 가계 기타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물품을 기업으로서 판매하는 자(the seller who carries on entrepreneurial activity)가 매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소매계약의 경우는 대우인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furnishing information about goods to buyer)하여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토인에게 그 소매상태상태를 인정하고 있으며(제495조), 비외로부터의 사용사용자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502조), 이른바 소비자보호법적 조항을 병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체, 品物供給契約(delivery of goods)의 경우이다. 소매계약이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물품공급계약은 기업이 기업활동으로서 물품 또는 개인의 가정용품이나는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제506조). 따라서 물품공급의 주체는 기업가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시대에는 물품공급의 주체가 사회주의조직체였기 때문에 사적약 계약주체와는 그 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었다. 또한 물품공급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국가는기업인 경우에는 제한필자가 되지 않고 재판필자가 따라 처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상에서는 물품공급계약도 일반의 매매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색복, or 상용 복에 대한 物品供給契約(delivery of goods for state needs)의 경우이다. 일반 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전통한 바와 같이 단순한 매매계약의 한 복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수요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의 경우는 국가의 개입을 막으려는 특별한 국가계약(state contract)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25조 이하). 아울러 러시아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2일 '국가의 발수생산물·원료·서비스수입법', 1994년 12월 13일 '국가적 필요품납입법' 그리고 1994년 12월 29일 '국가적 원료비축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국가적 수요에 따른 제약의 경우는 계약자와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25조 제2항에서 국가적 수요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규정(제506조 내지 제523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물품공급계약의 경우도 민법상의 계약범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민사관계법령의 민법전에서 이와 같은 국가 계약에 속하는 규정을 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위적 검계와 현실적 필요성의 간접관계를 태초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과도기적 일일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냉전, 경제체제(contracting)의 경우이다(제535조 이하 참조). 매수계약의 경우는 코호트스체제하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계약의 유형으로서, 특히 농산물의 매수계약(농산물생산자에게 의무로부터)으로써 임의의 기초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한다면, 현행 러시아 민법관계법령에서 묻지 못함에 따른 계약의 유형으로 존재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어떤 매수계약도 물품공급계약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매 수계약의 유형은 일반기업의 활동과는 달리 입각의 법으로 극복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농산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매수자에게 중상의 배제보다 무가운 책임을 인정하고(제536조), 농산물의 생산자에게는 파실이 있는 경우에도 세부분이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538조).
(7) 不動産買買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매매 계약 유형의 하나이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도 주택 등에 대해서는 매매행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러시아공화국 민법전에도 수개의 조문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聯邦民族典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면서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동정한 부동산거래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정한 전형계약이 바로 부동산매매계약이다.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폭넓게 不要式主義를 취하면서, 부동산매매계 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계약 즉 요식행위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 하고, 그 외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1964년 의 러시아공화국민법전 제239조에서는 부동산(부동산이라고 하여도 토 지는 토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을 의미한다)에대의 경우에는 공중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聯邦民族典에서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중증서의 작성은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러시아聯邦民族典에서는 부동산매매의 경우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요식행위를 요구하지만, 공중증서의 작성이라는 공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Ⅴ. 맺는 말

러시아聯邦民族典은 1994년 제1부 그리고 1996년 제2부가 제정되었다. 제1부와 제2부의 구별은 민법법률별 구별이라고 보다는 단순한 제정만 계정 구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부와 제2부 민법전만으로는 민법 중 계상권으로서도 아직 미완성의 민법전으로 판단된다. 즉나하면, 부당 이익과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 제1부와 제2부에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 국가의 민법전이 미완성인 채 공포되는 때는 찾아
보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러시아의 횡포는 허브스토로이카리에 세계의 전환에
가는 코끼라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허가에 민사법 중 계약법의
필요성이 결합되었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며,
또한 러시아로서는 1954년과 1965년 제1단계 및 제2단계로 나누어 민법
을 개정 중인 것으로 보여, 최근 가구의 민법개정 숭직임을 고려한다면 이
지형은 잠재에 또다시 민법의 개정이라는 과정에 직면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응집밀은 이미 러시아연방민법이 태생으로 인한 삶의기적
민법이라는 숙성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새로운 개정과제에 직면할 것으
로 예상된다.

私的 所有와 契約自由를 인정하면서 家家的 需要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 내지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적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본다면, 私的
所有와 契約自由를 인정하면서 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家
의 基本補償에는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다. 이와
한 충텔에서 본 때, 러시아가 과도기적 민법재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
가의 개입 없는 사적 사적의 원리를 왜곡하게 도입하는 데에 불虱을 느
끼고 있는 것은 아닐가 하는 의문을 접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경제
활동의 변화와 현상 그리고 자본주의 물질적 분열적으로 경제분위의 다
양화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러시아연방민법에서 국가개
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일정한 기여고리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시키가 가까운 장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연방민법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러시아연방민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일체가 횡포로
에 대하여 배제를 느끼겠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허지라 고통과 혼란을 겪는 것이
다. 다만, 사회주의적 소유권을 손에서 농치지 않으려는 횡포가 민법
의 발전을 저해시켰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편집과 그 밑에 사회주의국가들이 계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은
비교법적 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보아가 쓰고 오평에 논하는
사회주의체제의 간격이 있다. 최소한의 기본적 사림의 개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세부의 일정한 역사의 변화의 고용
에서 결론적 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1986년 이후 여러 요소에 합성되어 온 과정을 볼 때 미
루에 짧게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역사의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의 개입을 전후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논의해야 하는
무엇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 그 대응이 높이 및 적응력이
의외로 강할 것으로 사료되어 러시아연방민법의 성급
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여도 좋을 것이다.

초래, 현행 러시아연방민법은 그 체계적인 면에서 관례체계를 취
하고 있다. 그러나, 관례체계의 장점은 법률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민법의 경우, 특히 계약법영역에
서, 체계상의 불편이 있다는 점을 심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
유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개인과 법인이라는 단순한 관례체계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민법에서는 권리(거래)체제가 다양
하다는 점과 계약법에서조차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해 되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거래
관계에서, 러시아연방민법은 외국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
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재정로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무주체결제시험대 | 러시아(Russian Federation, RF), 민법(civil code), 러시아연방법률(RFC Civil Code), 사유(ownership), 시민소유(civil ownership), 사회주의적 소유(ownership of socialism), 국가적 소유(ownership of state), 협동조합적 소유(ownership of partnership), 집단 소유(joint ownership), 모델계약(model agreement), 소비전략 소매(retail purchase and sale), 물품공급계약 물품공급(delivery of goods), 국가공급(delivery of goods for state needs), 매매계약(contracting), 부동산매매(sale of real estate), 기업매매(sale of enterprise) |
<Abstract>

A Study on 1994 and 1995 RF Civil Code

Kim, Min-Kyu

The first and second part of Russian Civil Code were enacted respectively in 1994 and 1995.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art of Civil Code is not based on its coverage but simply an enacting step. Therefore, the current Civil Code is considered incomplete, only dealing with property rights. Although it is rare that a nation’s Civil Code takes effect without full coverage, it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at Russia desperately needs the Contract Law among private laws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missions for Perestroika.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ussian Federation Civil Code can be summarized into followings.

First, the RF Civil Code has been, unlike other socialized nations, attracted by western legal systems. Accordingly, it has not, in the process of changes from socio-economy to the capital economy, suffered from as much pains and confusions as that of other socialized nations.

Second, the conflict, though not considered immense in basic concept,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laws experienced a big change during a short perio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phenomena can be presumed from the fact that several new property laws have been enacted since 1995.
Third, the current Civil Code adopted the Pandecten in its organization system, which has merits of systematic organization. However, the Civil Code has some confusion especially in Contract Law system, because it has too many owners in a sale of goods, and it, also, envisions the government’s involvement even in the contract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that RF may provide some causes that foreigners may avoid transactions with Russian counter-parties.

Consequently, the current Civil Code is the final result of socio-reform efforts which Russia has pushed for since Soviet Federation period. Therefore, i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 phenomena that Russia did not experience a drastic change in its civil law system, unlike its political and power system.